

인구노령화와 동북아 안보

신성호
서울대학교

2012년 4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인구노령화와 동북아 안보

신성호
서울대학교

I. 서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관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 역량을 증가시키기에 따라 안보 딜레마에 빠지면서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Friedberg 1993-94; Betts 1993-94; Buzan and Segal 1994; Duffield 2003; Christensen 1999; Wu 2005-06).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부상은 결국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이 지역에서의 군사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Mearsheimer 2001). 실제 지난 시기 동북아 지역 내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과거 10년간 빠른 군사력의 성장을 보였다. 중국은 2010년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기 이전인 2005년에 이미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세계 15위라는 경제규모에 규모에 맞게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국방비 증가를 기록하여 세계 12위에 올랐다(SIPRI 2010). 일본의 국방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1퍼센트 유지라는 정책 속에서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그 절대액수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SIPRI 2010).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북한의 핵개발, 한일, 한중 간 역사 및 영토 분쟁,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민족주의의 증가 등 고질적인 정치, 군사적 문제들에 의해 더욱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Christensen 2011; Rozman and Lee 2006, 761-784; Matthews 2003).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대국 간의 견제, 국가 간 분쟁과 불신,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 다자 기구의 확산과 활성화, 사회 문화 교류 증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지역 내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empel 2005; Kurlantzick 2007; Katzenstein 2005; Katzenstein and Shiraishi 2006). 또한, 일부 구성주의자들은 동아시아 특유의 전통과 문화로 인해 중국의 부상이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국가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 진행될 것이며, 권력 이양이 생각보다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Kang 2003; 2004; Berger 2003, 387-420). 하지만 자유주의나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현실주의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다. 현실주의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과거 유럽 강대국 간 경쟁과 힘의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힘, 제도, 이념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과 협력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론의 토대가 되는 현실은 항상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영향을 줄 다른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Suh, Katzenstein and Carlson 2004, 1-33; Acharya 2008, 57-82). 21세기 국제정치는 국가를 넘어선 개인이나 민간단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변화나 빈곤과 기아, 지구적 질병 문제는 국가간 전쟁보다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하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간 관계도 이제 보다 복잡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근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인구변화는 한 국가의 내부 사회뿐 아니라 국가간 지정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인구변화가 이들 국가간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중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출산저하와 인구의 노령화라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력의 장기적인 쇠퇴를 가져온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효과가 일정기간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드러날 시점에서 이를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변화는 국제정치에서 주요 강대국간의 세력 전이를 결정짓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Eberstadt 2010, 58-67; 2003). 하스(Mark L. Haas)는 고령화되는 인구구조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강대국 간의 군사 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고령화’(global aging)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된다(Haas 2007, 112-117).

동북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동북아의 급속한 노령화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 특히 지정학적 경쟁과 군비증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고령화 추세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위축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복지비의 증가라는 두 현상은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다른 재정지출 특히 군사비 지출과 증가에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인구변화에 의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민주평화(democratic peace)가 아닌 인구평화 (demographic peace)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II.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1.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의 인구변화를 영국, 프랑스,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저출산과 노령화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표 1]의 경우 동북아 삼국의 출산율 저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에 인구 유지를 위한 필수 출산율인 2.1을 하회했으며 한국 역시 198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표 1] 국가별 출산율

국가명	기간 2005-2010	인구 대체율 통과시점
서유럽	1.68	
독일	1.32	1970-75
영국	1.84	1970-75
프랑스	1.89	1975-80
동북아시아	1.42	
일본	1.27	1955-60
한국	1.22	1985-90
중국	1.77	1990-95

출처: 유엔 세계인구전망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은 이들 사회의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2]에 의하면 한국, 일본, 중국의 기대 수명이 유럽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국가별 기대수명(남녀 모두)

국가	기간 1950-55	기간 2005-10	기간 2020-25
서유럽	67.7	80.2	82.1
독일	67.5	79.9	81.6
영국	69.2	79.4	81.3
프랑스	66.5	81.2	83.3
동북아시아	50.9	78.4	80.6
일본	63.9	82.7	84.9
한국	47.9	79.4	81.2
중국	40.8	73	75.8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현상은 종합적으로 한중일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표 3]은 각 국가별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인구의 7퍼센트 이상이 65세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전환된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². 일본은 2011년에 인구의 23퍼센트가 65세 이상 노령인구로 구성되면서 21퍼센트 이상으로 구분되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



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었다(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2011). 2025년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으며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고, 중국은 인구의 13.4퍼센트가 고령인구로 구성될 것이다. 2050년에는 일본과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국가	1950년	1975년	2005년	2025년	2050년
서유럽	10.6	14.1	17.2	22.4	26.2
독일	9.7	14.8	18.9	25.1	28.4
영국	10.7	14	16.1	19.4	23.2
프랑스	11.4	13.5	16.5	22.6	27.1
동북아시아	4.1	5.3	12.3	20.8	31.2
일본	4.9	7.9	19.9	29.7	35.9
한국	2.9	3.5	9.3	19.3	34.2
중국	4.5	4.4	7.6	13.4	23.6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노령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서유럽 3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67년이 걸렸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22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까지는 고작 평균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 43년이 걸린 서유럽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결과적으로 서유럽 삼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데 110년이 걸린 것에 비해 동북아 3국의 경우 32년 만에 이를 따라잡게 된 것이다.

[표 4] 초고령사회 도달시기(년도)

국가	고령화 → 고령 (7퍼센트) (14퍼센트)	고령 → 초고령 (14퍼센트) (20퍼센트)	고령화 → 초고령 (7퍼센트) (20퍼센트)
유럽	67년	43년	110년
독일	(1932) 40 (1972)	37 (2009)	77
영국	(1929) 46 (1975)	51 (2026)	97
프랑스	(1864) 115 (1979)	41 (2020)	156
동북아시아	22년	10년	32년
일본	(1970) 24 (1994)	11 (2005)	35
한국	(2000) 17 (2017)	9 (2026)	26
중국	(2001) 25 (2026)	10 (2036)	35

※ () : 고령화, 고령, 또는 초고령 사회 도달 년도

출처: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www.ipss.go.jp);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2.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발전의 저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노령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저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 감소가 일어나고 국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1990년대 일본은 일명 ‘3K’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일본은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Fuyuno 2007). 2000년대 한국에서는 일본의 ‘3K’와 유사한 ‘3D’ 직종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역시 단순 노동직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³. 중국은 아직 노동인구의 감소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지는 않았지만 중국 역시 인구노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감소는 시장과 경제의 축소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 층에 대한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표 5]에 의하면 2050년까지 동북아시아 3국은 서유럽 3국보다도 오히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50년에는 12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고령인구를 책임지는 반면 2000년에는 그 수가 4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에는 한 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고령인구를 책임지는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2000년까지는 노동인구 10명당 고령인구 한 명 꼴로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였지만 2050년에는 각기 3대1, 2대1의 비율로 급속히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녀 가운데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다.

[표 5] 잠재부양지수: 고령인구(65세 이상) 당 노동인구(15세-64세)

국가	1950년(천명)	2000년(천명)	2050년(천명)
서유럽	6.3	4	2.3
독일	7	4	2
영국	6	4	3
프랑스	6	4	2
동북아시아	15	8	2
중국	14	10	3
일본	12	4	1
한국	19	10	2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http://esa.un.org/unpp>

III.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사회(안보)보장(Social Security)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북아국가들은 사회보장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실시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보면, 한국이나 중국도 각각 2000년과 2001년 노령화 사회 진입한 것에 맞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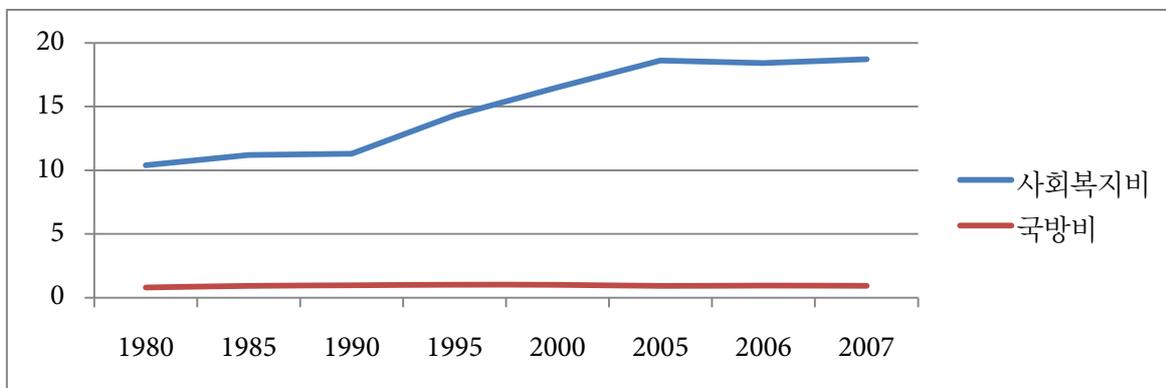


사회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을 수배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비를 포함한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을 유도할 것이다.

1. 일본의 국방비 : GDP 대비 1퍼센트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막대한 재원을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했으며, 이는 중국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낮은 군사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선진기술과 강력한 경제력에 힘입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군비 증강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1976년 <방위 계획 대강>을 통해 기본 국방준비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방비가 GDP의 1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세워졌다(Japan Defense Agency 1989). 이러한 일본의 국방비 동결은 일본이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향후 일본은 연금과 의료비용 지출이 급증하면서 1970년 대비 1996년 사회복지비용은 총액기준으로 19배 증가하였고 1인 기준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2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수가 감소되고 사회복지비 재원 마련은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회보장부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4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약 27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Jackson and Howe 2003). [그림 1]을 보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총액수준과 GDP 대비 측면에서 국방비 지출에 비해 그 격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85년에서 2007년 사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1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지출은 10퍼센트 수준에서 19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OECD; Japan Statistics Bureau).

[그림 1] 일본의 사회복지비 대비 국방비(GDP대비)



출처: OECD Statistics 2010, Ministry of Finance, Japan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219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New York Times February/7/2010). 따라서 지속되는 복지부문의 비용증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다른 부문의 정부예산을 감축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지적된다. 실제 일본의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9년 일본 총선에서 사회복지를 강조한 민주당이 북한 핵문제와 미일 동맹 등 안보정책을 앞세운 자민당을 누르고 승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⁴. 실제 민주당 정권은 2010년 예



산 중 사회복지비를 전년대비 9.8퍼센트 증가시켰다(*Japan Times* January/1/2010; *The Yomiuri Shimbun* January/30/2010).

2. 한국 : <국방개혁 2020>과 <비전 2030>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속에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북한의 재래식 도발 위협이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높고 역대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증가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되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방예산의 증액이 점차로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여왔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980년 6퍼센트 수준에서 1995년 2.8퍼센트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1981년 30억 달러 수준에서 1996년 15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 약 265억 달러의 군사비로 세계 10위권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라는 야심 찬 군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대폭적인 군사비 증강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군 인력감축을 보완하고 전시작전권 반환 대비를 위해 향후 15년간 약 445억 달러의 국방예산 증액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초기부터 비현실적 예산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면 예산 증액 안이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1퍼센트의 GDP 성장률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는 한국경제성장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둔화되기 시작한 한국경제는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DP 성장률이 4퍼센트 미만의 성장도 거두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방개혁 2020>하에서 매년 9.9퍼센트의 증액을 상정하던 국방예산의 경우 2009년 5.6퍼센트, 2010년 3.6퍼센트 증액에 그치는 현실로 나타났다(국방부 2008;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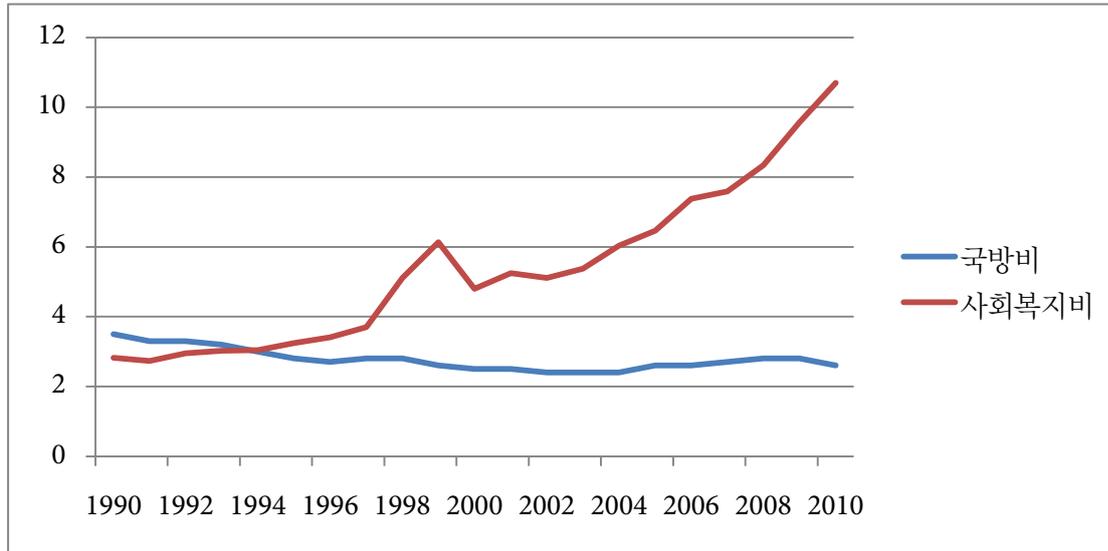
한편 1990년대 초부터 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는 사회보장비용 증가 요구에 대한 압력에 당면하였다. 한국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시작 이후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은 2007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수준인 20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7퍼센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7).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는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해인 2006년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는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의 삼분의 일 수준 이하로써, OECD 회원국 중 최하인 것을 지적하면서 장기적 국가전략 관점에서 <비전 2030>을 통해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개선, 노후복지 확대, 의료보험개선, 교육 개혁, 직업 교육 및 사회 격차 축소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사회복지비를 현재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1퍼센트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⁵.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개혁 2020>에서 계획한 국방비 증가에 심각한 부담이 오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의 정부 지출을 보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에 비해 복지비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비 지출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와 같이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1990년 2.9퍼센트 수준에서 2010년 10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에 국방비는 동기간 3.7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보인다(한국통계청;



국방부 2010).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들어갈 국민연금의 경우 2005년 GDP 대비 0.4퍼센트 수준에서 2050년에는 7.3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그 밖에 필요한 사회복지혜택을 정부가 모두 지원하려면 205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최소한 25퍼센트를 쉽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국의 사회복지비 대비 국방비 (GDP 대비)



출처: 통계청; 대한민국 국방부(2010)

3. 중국의 국방 예산: 여전히 더 증가할 여유 있어

지난 삼십 년 동안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오면서, 중국은 “국방 개발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성장에 종속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국방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Part 12). 이를 반영하여 1978년에서 1987년 사이, GDP는 14.1퍼센트 그리고 정부 지출은 10.4퍼센트가 증가하는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3.5퍼센트의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1987년에 GDP의 4.6퍼센트와 국가 지출의 14.96퍼센트에 달했던 연간 국방지출이 1978년에는 각각 1.74퍼센트와 9.27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러나 1998과 2007년 사이, 중국이 국방 전력화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중국의 국방 예산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제 7회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은 경제와 군사 개발에 동등한 무게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방에 대한 경제개발우위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Japan Ministry of Defense 2008, 43). 이로 인해 2006년과 2007년에 중국의 국방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20.4퍼센트와 19.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Part 7). 이와 같은 중국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증가는 중국군의 낮은 투명성과 함께 미래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 역시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체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30년에는 24퍼센트로, 2050년에는 33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일보> 201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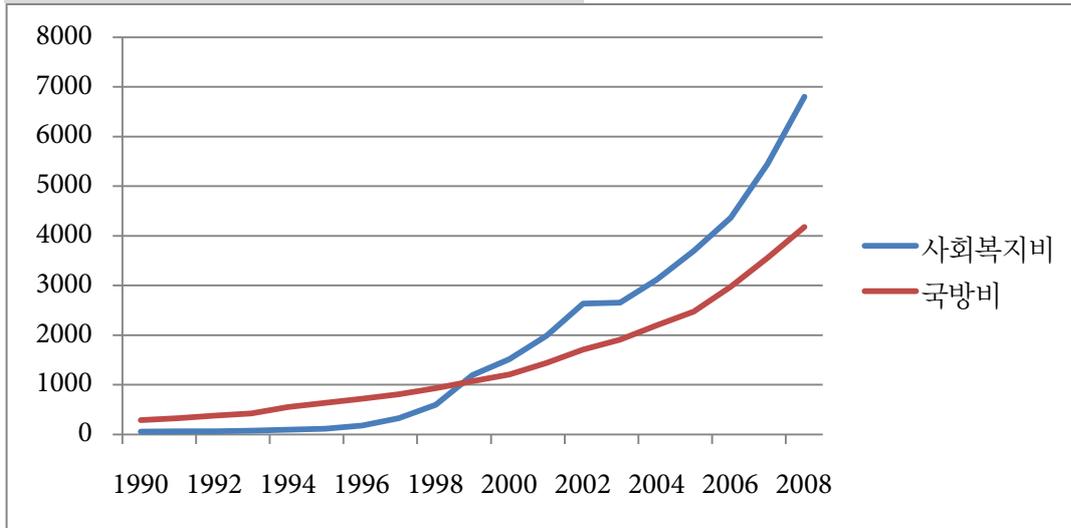


중국 역시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고령화가 아직은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그 충격과 여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2,900달러)은 한국(21,000달러)의 7분의1, 일본(38,000달러)의 1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World Bank 2008).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시기에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이를 감당할 재정적,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즉 일본이 1970년대 중반, 한국이 2000년 각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무렵 1인당 GDP는 각각 20,000 달러와 10,000달러에 달했으나, 2001년에 고령화로 접어든 중국의 1인당 GDP는 1,000달러에 그쳤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고령화 전에 부를 축적했던 반면,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를 겪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는 점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격한 근대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배가시킬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노동자의 극소수들만이 자신들의 퇴직 이후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 연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인구는 전체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노인 부양대책인 ‘자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1가구1자녀 정책을 펼친 탓에, 가족 네트워크의 약화와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여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경제성장에 따른 풍족한 삶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중국 정부와 지도부가 직면할 정치, 사회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국가 또는 집단 소유 기업을 넘어서는 기본 연금 제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보편 보장(universal coverage)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1998년과 2000년 각각 ‘노동 및 사회 안전부’와 ‘국가 사회 보장 기금’을 설립하였다. 2009년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선언하였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09).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신속히 사회 안전 제도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공산당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 사회 안전망 제도는 기부 및 상용 보험을 보조로 하면서 시민의 기본 노후 보험과 의료 보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Xinhua News May/23/2009). 이에 더해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 의료보험, 고용, 사회 안전망, 그리고 주택공급과 같은 공공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중국의 싱크탱크는 2020년까지 사회 안전망 지출을 재정수입의 27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림 3]은 중국의 국방비와 사회보장비가 동시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2000년대 들어 사회보장비가 군사비를 추월하면서 그 격차를 벌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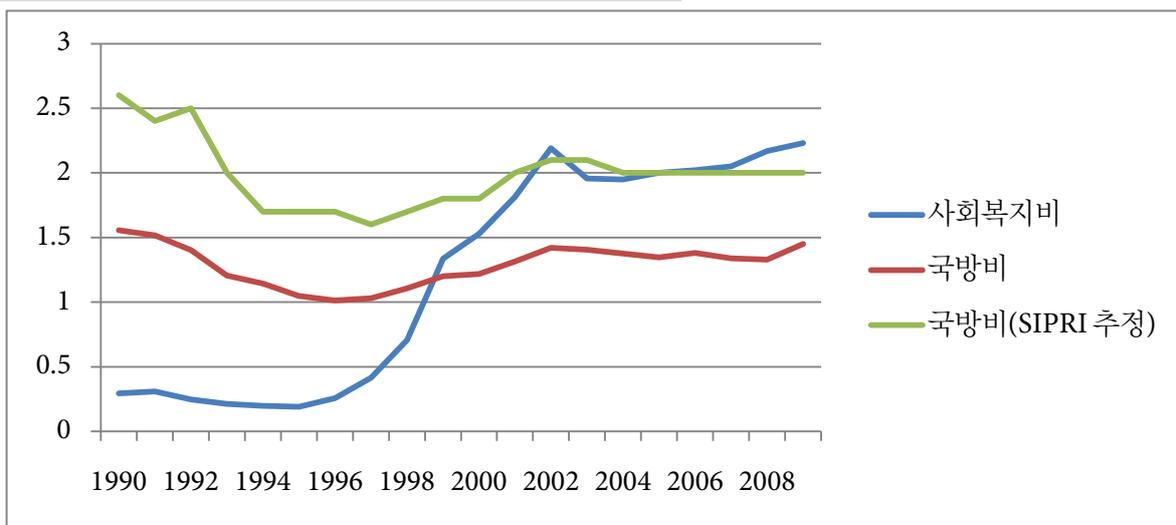
[그림 3] 중국 사회 안전망과 군비 지출 (단위: 억 Yuan)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2008-2010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그림 4]는 GDP 비율 대비 정부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1994년 사회 안전망 지출은 GDP의 0.2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0년 후 거의 10배나 증가한 2.01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군사비 지출은 1.05퍼센트에서 1.35퍼센트의 경미한 증가를 보인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여서 발표한다는 의혹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에 나타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데이터에 따른 군사비 지출은 중국 통계 연표에 의한 지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2001년 중국이 고령화 사회가 된 이래, 사회보장비 지출은 SIPRI 자료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여전히 국방비를 추월하고 있다.

[그림 4] 중국의 사회 안전망 지출과 군사비 지출(GDP 대비 비율)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2008-2010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IPRI⁶



IV. 동북아시아의 고령화와 군비경쟁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노령인구 증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등의 요인들은 이 지역에서 경쟁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노인 인구나 그들의 사회안전보장을 위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이 각각 세웠던 국방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야심찬 국방계획을 감당할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50년이 되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동북아 국가들은 군사경합을 벌이기에는 너무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1.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군비의 함수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인구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신경 써야 하는 우선과제들 중 하나이다.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Madsen and Glosserman 2010).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와 고령인구급증이 맞물린 상황에서 국방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현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도 곧 일본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최부유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인구급증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Howe, Jackson and Nakashima 2007). 한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노년층의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은 지금의 GDP 대비 2.7퍼센트에서 18.9퍼센트로 증가할 것이며, 의료 보건비등은 7.8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저세율을 택하고 있는 국가여서 고령인구 급증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증가하는 복지관련 지출요구와 낮은 경제성장, 그리고 높은 세금부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3중고 속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향후 20, 30년간 높은 경제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노령인구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커다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berstadt 2010). 지금까지는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형식으로 노령층에 대한 관리를 하여 GDP 대비 3퍼센트만이 연금을 사용했으나, 2030년이 되면 공공연금이 10퍼센트로 급증할 것이며, 2050년에는 15퍼센트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다. 약 1억 5천만 명의 도시유동인구들은 공공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급증하는 빈부격차 속에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국정부는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전 국민에게 보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Howe, Jackson and Nakashima 2009).

한중일 3국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수요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비의 예산증가액이 줄어드는 추세는 동북아 국가들의 사회복지비 수요증가를 반영하기도 한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0년에는 7.5퍼센트증가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두 자리 수 증가율이 처음으로 한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일본 역시 2011-15년 기준 국방비 예산을 줄였다(Reuters May/4/2010; Xinhua News December/14/2010).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은 국방정책들보다 사회보장 정책들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이 전체 정부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Finance 2010; Limb Jae-un 2010). 중국 역시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추세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3국의 인구 고령화가 이들간에 협력과 평화를 저절로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 국가 간에 존재하는 불신과 갈등은 여전하다. 더욱이 이들이 이미 구축한 군사력 만으로도 동북아에 심각한 무력충돌과 파괴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의 국방력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아직은 인구가 상당히 젊고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덜하다.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7년에서 2008년에는 17.6퍼센트, 2008년에서 2009년에는 14.9퍼센트의 국방비를 증가시켰다(*China Daily March/4/2009*). 중국은 1997년 이후 5배 넘는 경제 성장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야심찬 국방근대화를 추진하였다(Bitzinger 2009, 113). 지난 23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은 평균적으로 연 10퍼센트 넘게 증가했다. 2012년 국방예산은 1,20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까지 연 18.75퍼센트의 증가율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2,38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8개 군사대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Financial Times February/13/2012*). 이러한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⁷.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노령화로 인해 국방비 지출에 큰 제약을 받는 일본과 한국에 커다란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한일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나가야만 할 것이다(Cha 1999, 54-58). 이 경우 동북아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역외균형자로서의 역할과 미군의 주둔이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력은 2020-25년이 되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Jackson and Howe 2008, 11-12). 하지만, 2020년이 되면 중국 사회는 본격적인 고령화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지출 역시 새로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즉, 2020년에서 2030년이 되면 동북아 삼국 공히 심각한 군비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역으로 향후 10-20년간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중일 간의 세력 균형과 동북아 평화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이 절실한 것이다(Obama 2007, 12).

V. 결론

앞서 살펴본 동북아의 급속한 인구변화는 한국의 국방 정책과 전략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는 앞으로의 군 개혁 및 국방정책 수립에서 노령화에 따른 장기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인구 노령화와 감소는 당장 앞으로 군 인력 충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군대에 입대할 젊은 남성 인구의 감소는 현재 의무복무로 인한 사병위주의 징집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육군 중심의 60만 대군을 유지하기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무복무 연한을 줄여왔다. 그러나 군에 복무할 절대 징집대상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의 군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한번 단축한 의무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복무연한을 늘릴 의지가 없는 한 우리군 인력은 앞으로 점차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적으로 감소하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급의 장기 복무자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는 장



기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무복무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문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군 전투 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훨씬 많은 인건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차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의 수립에서 가장 큰 도전은 줄어드는 정부재원이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국방인력 감축에 따른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문제점은 그 비용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및 세수의 저하와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는 국방비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킴으로써 모병제로의 전환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다른 분야, 즉 신무기의 개발이나 획득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국방정책과 개혁은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감소하는 인력과 인건비의 상승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무기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구조와 전략을 개발할 것인가의 어려운 과제에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보이익과 이에 대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무기체제의 구입과 정비도 무조건 각 분야의 최신무기를 구입하기 보다 우리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지형에 맞는 맞춤형 구조를 구축하려는 지혜와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크게 사회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방과 함께 다른 분야, 즉 사회안보로 해석되는 복지 외에도 교육, 의료, 기간 시설 등의 중요한 우선순위들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인구 노령화와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저하, 내지는 역전 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의 이행이 결코 쉽지 않았듯이,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오랜 시간과 함께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요구되는 더욱 어려운 도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택의 하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해외인력의 수입이다. 2012년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드디어 100만을 넘어섰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은 한국 사회가 가진 고질병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대량 이민의 경험이 전무한 한국사회에 다수 외국인이 정착하면서 나타나게 될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제기한다. 외국인의 대량 유입은 단순히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조화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단일민족 전통을 기반으로 수립된 우리의 안보관 및 국방정책 수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민족과 통일을 기치로 국가안보를 추구해온 국군에 대한민국 국적의 유색 혼혈인 젊은이를 어떻게 합류시킬 것인가는 단순히 인력충원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안보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이는 장차 다가올 통일 준비와 관련한 남북한 병사들간의 화합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더욱 복잡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한국민족 중심의 민족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3국의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는 오늘 날 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지역에서 국방비보다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을 더욱 많이 증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난 2011년 퇴임 직전 유럽순방에서 미국의 게이츠(Robert Gates) 국방장관은 유럽 NATO 국가들 중 오직 네 국가만이 GDP 대비 2 퍼센트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함으로써 너무 많은 안보 부담을 미국에게 지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Gates 2011).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급증은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는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이며, 세수를 줄일 것이며, 정부의 예산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과 보건서비스 수요를 위한 예산을 확충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25년이 되면 고령인구에 따른 연금과 보건서비스 지출을 위해 다른 부문의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전망이 있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28-41). 중국 정부



역시 2010년에 농촌 및 지방지역에 제공하는 사회안전서비스에 따른 지출로 인해 국방비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사회인구노령화는 이들 사회의 가치관, 국가의 정책목표 우선순위 등의 설정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날로 노령화되는 인구가 전통적 국가 안보보다는 자신들의 국내적 사회보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은 단순한 국방비 지출확대로 인한 국방력 강화보다는 국내적 사회안전망 설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국가안보에서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중일 삼국이 소모적인 안보경쟁과 대결보다는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협력의 단초일 수도 있다⁸.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불신과 경쟁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미흡한 동북아에 인구 노령화는 이들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註) _____

- ¹ 유엔에 의하면 한 사회가 기존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 ² 유엔에 따르면 인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퍼센트에 도달할 경우, 고령화사회, 14 퍼센트의 경우 고령사회, 20퍼센트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the United Nations 2008)
- ³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한국도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백2십여 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불법체류자까지 합할 경우 1백5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일보〉 2008/4/21; *New York Times* November/2/2009).
- ⁴ 선거 기간 중 ‘콘크리트보다 국민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민주당의 하토야마(鳩山由紀夫) 당수는 자민당 정권을 교체하여 의회 내 토건족과 같은 수구세력이 잡고 있는 정부예산을 노령화, 저출산, 과도한 수출주도형 경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쓸 것을 약속하였다(*The Economist* August/20/2009)
- ⁵ 계획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 연금수혜자의 숫자가 현 17퍼센트서 67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경제부 2006).
- ⁶ 중국의 사회적 소비는 의료 서비스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실제 군비 지출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높다고 여겨진다.
- ⁷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8년 이후 8퍼센트 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



며, 202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⁸ 2011년 5월 한중일 삼국은 4차 삼국정상회담을 가졌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08. <국방백서>.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 재정경제부. 2006. “비전 2030-Korea: A Hopeful Nation in Harmony.” 8월 30일.
[www.korea.net/image/news/Vision2030\(060830\).doc](http://www.korea.net/image/news/Vision2030(060830).doc) (검색일: 2009년 2월28일)
- 한국 통계청
OECD 공공지출통계
<중앙일보> . 2011. “중국 ‘4-2-1 가정’ 의 풍경화.” 10월 16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41561&ctg=13
- <한국일보> . 2008. 4월 21일.
- Acharya, Amitav. 2008. “Theoretic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Asia.”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ed. Davi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57-82.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Berger, Thomas. 2003. “Power and Purpose in Pacific East Asi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ed.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387-42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tts, Richard K. 1993-94.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 3 (Winter)
- Bitzinger, Richard A. 2009. “A New Arms Race in the Asia-Pacific?” *The International Spectator* 44, 2(June)
- Buzan, Barry and Gerald Segal. 1994.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36, 2 (Summer)
- Cha, Victor.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ina Daily*. 2009. “China’s defense budget to grow 14.9퍼센트 in 2009.” March 4.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9-03/04/content_7535244.htm
- Christensen, Thomas J. 1999.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 4 (Spring)
- Christensen, Thomas. 2011. “The Advantages of an Assertive China.” *Foreign Affairs* 90, 2 (March/April)
- Defense of Japan. 1989.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October 29, 1976)” *Japan Defense Agency*.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docs/19761029.O1E.html>.
- Duffield, John. 2003. “Asia-Pacific Security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 Pacific*, ed.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berstadt, Nicholas. 2003. “Strategic Implications of Asian Demographic Trends.” In *Strategic Asia 2003-2004: Fragility and Crisis*, ed. Richard Ellings, Aaron Friedberg, and Michael Willi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 Eberstadt, Nicholas. 2010. “The Demographic Future.” *Foreign Affairs* 89, 6(November/December)



- Eberstadt, Nicholas. 2010. "The Demographic Future." *Foreign Affairs* 89, 6: 58-67 (November/December)
- Financial Times*. 2012. February 13.
- Friedberg, Aaron L. 1993-94.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 3 (Winter)
- Fuyuno, Ichiko. 2007 "Aging Society in Japan – Part I." *British Society for Research on Ageing*
<http://www.bsra.org.uk/files/ageing퍼센트20society퍼센트20report퍼센트20part퍼센트20I.pdf>.
- Gates, Robert. 2011. "The Security and Defense Agenda; the Future of NATO." *U.S. Department of Defense* (June 10) <http://www.defense.gov/speeches/speech.aspx?speechid=1581>
- Haas, Mark L. 2007. "A Geriatric Peace?: The Future of US Power in a World of Aging Popu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2, 1: 112-117 (Summer)
- Howe Neil, Richard Jackson and Keisuke Nakashima. 2007. "The Aging of Korea." CSIS.
- Howe Neil, Richard Jackson and Keisuke Nakashima. 2009. "China's Long March to Retirement Reform." CSIS.
- Howe, Neil and Richard Jackson. 2003. "The 2003 Aging Vulnerability Index." CSIS
http://csis.org/files/media/csis/pubs/aging_index.pdf
- Howe, Neil and Richard Jackson. 2008. "The Graying of The Great Powers: Demography and Geopolitics of the 21st Century." CSIS (May)
http://csis.org/files/media/csis/pubs/080630_gai_majorfindings.pdf (검색일: 2009년 7월 29일)
-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China's Social Security and Its Policy." *Social Security White Paper* (September 7).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Nominal GDP list of countries. Data for the year 2010."
- Japan Ministry of Defense. 2008. "Defense of Japan."
-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2011. "Demographics of Japan 2011" Statistics Bureau. <http://www.stat.go.jp/data/jinsui/pdf/201102.pdf> (검색일: 2011.3.15)
- Japan Statistics Bureau. "Defense of Japan (1955-)."
- Japan Times*. 2010. January 1.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ed20100101a1.html>
- Kang, David C. 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27, 4 (Spring)
- Kang, David C. 2004. "Hierarchy, Balancing, and Empirical Puzzles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28, 3 (Winter)
- Katzenstein and Shiraishi. 2006. *Beyond Japan: The Dynam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2005. *A World of Reg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urlantzick, Joshua. 2007. "Pax Asia-Pacifica? East Asi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 Limb Jae-un. 2010. "Balance between welfare and deficit is the target." *JoongAngIlbo*. September 29.
- Matthews, Eugene A. 2003. "Japan's New Nationalism." *Foreign Affairs* 82, 6 (November/December).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inistry of Finance. 2010. "Highlights of the Budget for FY 2011." December 2010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Japan and Ministry of Defense Japan.
<http://www.stat.go.jp/english/data/chouki/31.htm>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U.S. Depart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November USGPO, 38-41.
http://www.dni.gov/nic/PDF_2025/2025_Global_Trends_Final_Report.pdf (검색일: 2011년 6월 18일).
- Obama, Barack. 2007.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86, 4 (July/August)
- OECD. 2010. "The OECD Statistics 2010."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www.mod.go.jp/e/d_budget/pdf/071225.pdf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7."
- Pempel, T. J. 2005. *Remapping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8 Part 12."
http://www.china.org.cn/government/central_government/2009-01/20/content_17155577_14.htm (검색일: 2009년 7월 20일)
-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08 Part 7."
-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China's National Defense in 2010."
- Reuters. 2010. "China says defense spending rise slows to 7.5 percent." May 4.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230A720100304>,
- Robert Madsen and Brad Glosserman. 2010. "Economic Realities Limit Japan's Security Options." *Pacific Forum CSIS*.
- Rozman, Glibert and Shin-Wha Lee. 2006. "Unraveling the Japan-South Korea 'Virtual Alliance': Populism and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Face of Conflicting Regional Strategies." *Asian Survey* XLVI, 5: 761-784(September/October)
- SIPRI. 2010. "SIPRI Year Book 2010."
- Suh, J.J., Peter J.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2004.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e Economist*. 2009. August 20. <http://www.economist.com/node/14258696>
- The New York Times*. 2009. November 2.
- The New York Times*. 2010. February 7.
http://www.nytimes.com/imagepages/2010/02/08/business/08debt_g.html (검색일: 2010년 2월 10일)
- The United Nations. 2008.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United Nations.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select variant: medium.
- The Yomiuri Shimbun*. 2010. January 30. <http://www.yomiuri.co.jp/dy/business/T100129007150.htm>
(검색일: 2010년 1월 25일).
- World Bank. 2008.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DATASTATISTICS/0,,contentMDK:20394802~menuPK:1192714~pagePK:64133150~piPK:64133175~theSitePK:239419~isCURL:Y,00.html>. (검색일: 2010년 1월 18일)



Wu Xinbo. 2005-06. “The End of the Silver Lining: A Chinese View of the US-Japanese Alliance.”

Washington Quarterly 29, 1 (Winter).

Xinhua News. 2009. “President Hu urges to promote social security system.” May 23.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9-05/23/content_11424570.htm (검색일: 2009년 7월 20일)

Xinhua News. 2010. “Japan sets defense budget at \$281 bln for fiscal 2011-1.” December 14.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business/2010-12/14/c_13648638.htm

필자약력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성호 교수는 미국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동서연구소(East-West Center)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구관심은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Nuclear Sovereignty vs Nuclear Security: Renewing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Demographic Peace: Rapid Aging and Its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n Arms Rivalry,” “The ROK-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A Smart Alliance in the Age of Complexity,” 《핵 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부시와 오바마》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원(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